

## 하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방안 필요하다

### 도시의 활력과 일상생활공간으로서 수변공간 활용의 중요성 부각

도시 내 하천은 역사적으로 도시발전과 문화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근대 이후 우리나라 하천은 치수와 이수 등 방재 기능 위주로 관리되어왔으며 하천 양안을 따라 도심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축이 형성되어 하천과 도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

- 기존에 조성된 친수시설이나 하천의 생태환경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변공간의 활력이 저하

인구감소 및 산업침체 등 국내 230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166개(72%) 자치단체가 쇠퇴 진행 중(국토연구원, 2014)

- 대도시는 구도심 인구가 40~70% 감소하는 등 도심부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한편, 지방 중소도시는 도심과 외곽지역 구분 없이 전체가 침체되는 양상
- \* 특히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의 쇠퇴가 심각하며, 경제력, 정주여건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낙후

#### 도시의 경제적 기반 및 삶의 공간으로서 하천에 대한 재조명

- 해외에서는 하천주변을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거나 쇠퇴한 지역을 재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수변공간을 정주공간, 산업공간, 문화 및 레저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사례 증가

#### 전국 지자체마다 다양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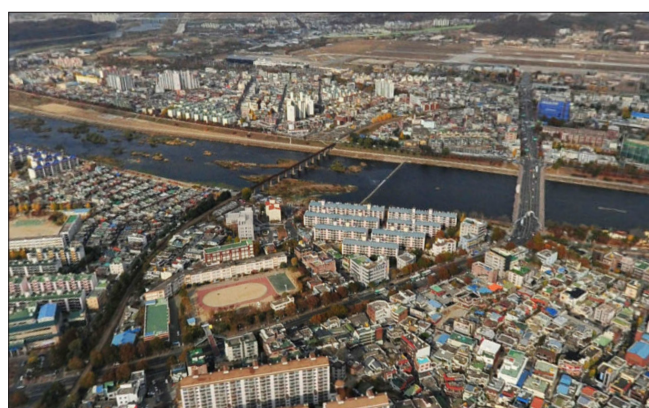
-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즐기는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내 생태기능 회복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가공간으로 활용
-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지구에 하천이 인접하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서로 연계하여 지역의 재생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는 매우 적음
- 지역 활성화의 촉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과 하천정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마련이 필요

### 국내 수변공간 활용 현황과 문제점

#### 수변공간의 활용 유형은 ①주거, ②상업 또는 문화, ③산업, ④자연보전 또는 레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 가능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가 대규모 고층 주거단지로 정비됨에 따라 수변공간의 경관과 접근성을 단절시키는 등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
- 상업 및 문화공간은 대부분 제내지에 위치하며, 수변공간과의 연계성 없이 별도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친수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어메니티 증진이 요구
- \* 해외의 경우 제외지에 상점거리가 형성되거나, 수변공간의 어메니티와 도시 장소성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제내지에 고층의 업무지역으로 이용
- 산업지역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대규모 부지 및 공업용수 확보, 간선도로 및 하천을 통한 물류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나 수자원 오염과 수변경관 및 접근성 단절 등의 문제점이 있어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정비가 요구
- 녹지지역은 수변공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일부지역의 경우 공원, 광장, 생태체험장 등으로 활용

〈주거지역, 동구 신일동 일원〉



〈공업지역, 북구 노원동 일원〉



〈상업지역, 북구 산격동 일원〉



〈녹지지역, 수성구 고모동 일원〉



■ 〈그림 1〉 수변공간 활용 사례(대구 금호강) ■

#### 하천 양안을 따라 형성된 도로로 시민들이 수변공간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등 수변공간과의 소통이 단절

-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경우에도 교통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수변공간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모색이 필요

하천정비사업은 관련 법·제도 및 지침상에 하천 본래의 기능인 방재에 치중하는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며,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제도 또한 하천을 단순히 도시의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로 보고있어 하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가능성을 배제

- 수변공간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하천기본계획, 하천공사시행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의 계획수립과정은 관계기관 협의라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천과 도시 간 연계에 한계(권영상·조민선, 2010)

### 도시재생과 하천정비사업 연계의 한계

기초지자체의 사업 집행단계에 있어 하천정비 담당조직과 도시재생 전담조직은 하천에 대한 보존과 개발·활용이라는 목적이 상충되어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하지만, 지방하천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하천법」제44조) 상당부분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하천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미비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외의 도시 관련 계획 지침에는 하천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하천을 포함한 통합적 계획수립이 어려운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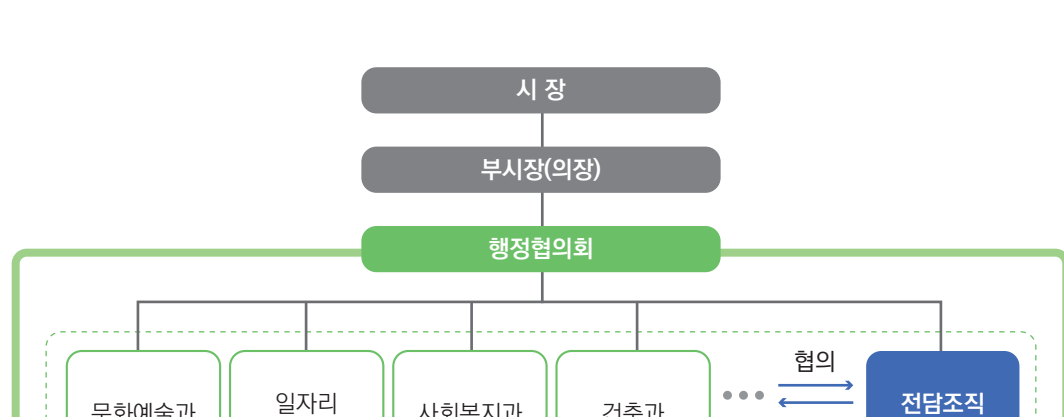
- 하천 관련 계획에는 하천의 치수, 이수 및 환경보존과 하천공간의 시설물 설치 지침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하천과 하천 부지를 연계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사업과 하천정비사업 간의 연결성이 부족

도시재생은 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정비는 도시재생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재생과 하천정비사업 연계를 위한 방안

#### 도시재생과 하천정비사업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간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전담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기능 강화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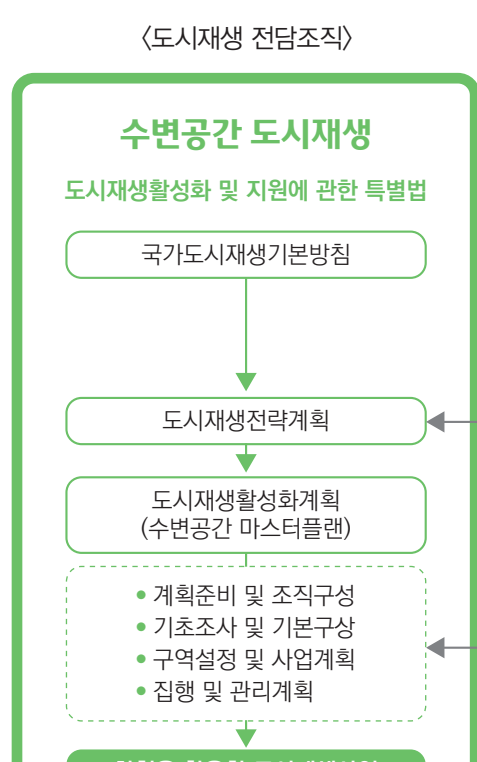


자료 : LH 도시재생지원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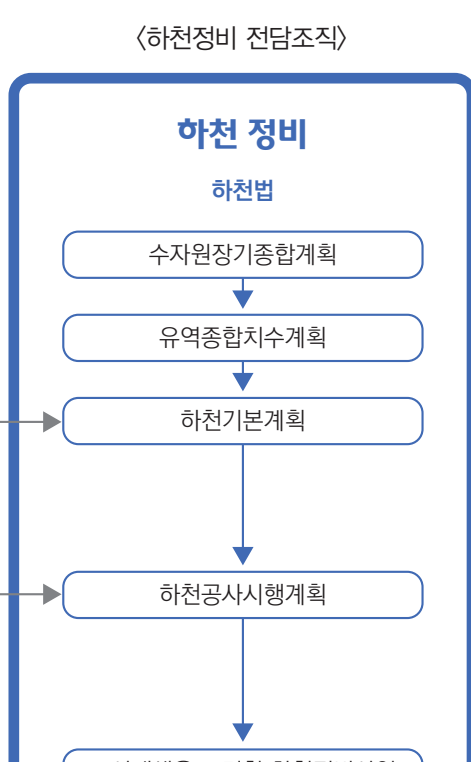
■ 〈그림 2〉 기초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 행정전담조직 및 행정협의회 구성 예시 ■

- 지방하천의 지구지정 의무화
  - 「하천법」 제44조의 지구지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수변공간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
- 하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하천정비사업 예정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구역을 설정하고, 사업방향을 결정
  -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구역설정 및 사업계획과 연동되어 하천을 단순히 방재시설이 아닌 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반영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과 도시지역과의 사업 연계성 향상 가능

〈도시재생 전담조직〉



〈하천정비 전담조직〉



■ 〈그림 3〉 도시재생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의 연계 추진방안 ■

#### 수변공간계획의 방향 설정

- 공공공간을 통한 공공성 개선
  - 수변공간의 공공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수변공간과 인접하여 공공공간의 배치를 필요로 있음
- 도로공간재편을 통한 접근성 개선
  - 하천제방의 간선도로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하천과 이격시키는 등 도시기본계획 상 도시공간구조의 축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경제성과 우회 교통에 의한 교통량의 증가 및 지체 예상으로 입체화를 통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수변경관의 향상
  - 하천주변이 고밀도의 주거단지인 경우 통행축 등 개방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공장 건축물로 인해 폐쇄적 수변경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생태하천조성을 통한 친수성 확대
  - 투수성 재료를 활용한 치수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친환경적 수변공간 조성, 도시공간과 하천의 연계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생태하천 조성

▶ 참고자료 : 이제연·박진경(2018), 「수변공간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용문의 : 이제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033-769-9894, leejiy@krla.re.kr)